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장애인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 제출
-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공동기자회견 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 개최
- “장애인 권리보장과 교육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 노력하겠다”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법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2일(금)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교육법 개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과 특수교육법 개정과 장애인 교육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구축,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실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2007년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이후 장애인 교육의 양적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질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조승래 의원은 2017년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특수교육법 10년과 새로운 10년을 향한 모색 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를 제안했고,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2018년부터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6장 58조로 구성되며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지원센터 기능 확대, △국가→시도→시군구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장애 학생 차별, 인권침해 금지 강화,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특수교사 협력 근거 마련, △교육 양성기관의 통합교육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진로·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도 중퇴 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은 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 동참하며 장애인 권리보장과 교육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조승래 의원은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을 조금씩 고쳐왔지만, 이제는 변화한 사회 환경과 교육 수요에 맞게 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교육의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팀장은 “장애인 권리보장과 교육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를 바랍니다.

□ 특수교육법 개정 기자회견 및 장애인 교육정책 간담회(안)

-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9시 40분 기자회견 / 10시 간담회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참석자
 - (당) 박찬대 의원(팀장), 최혜영 의원(간사), 조승래 의원(대표발의) 등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
 - (참여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